

2022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2. 10. 17.부터 10. 21.까지 5일간 6명이 참여하여 2018년 6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5건(본처분 10건, 현지처분 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5건은 대 내·외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분	처분현황(건)			처 분 요 구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원)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추징 환수	환급 금액
계	15	10	5	18	6	11	1	4 / 7,117,460	4 / 7,117,460	—

2022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지출 불필요한 국내여비 미반납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센터

내 용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센터)에서는 □□ 방문 및 업무협의 등을 위한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여비를 지급였고, 당시 출장자 중 A는 관계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직원 격려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인천광역시 여비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을 통해 저녁 식비 지출이 불필요하므로 지급받은 식비 중 A는 0식(00원), B 등 0에 대해서는 0식(00원)에 해당하는 식비 00원을 정산·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 정] 정산·반납하지 않은 식비 00원은 환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병가 사용 부적정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내	용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하고, 그 중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하며, 병가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부서장 등)의 승인을 득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야 하고,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또한 「규정」 제7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병가 기간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되므로 병가 기간이 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여 해당연도 연가 일수를 재산정 하여야 하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규정」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결근 일수가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Ⅷ. 휴가 -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나. 병가 - (3) 병가의 운영방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동일사유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에 대한 병가 사용 승인 시 허가권자는 사후에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진단서를 확인하여 소속 공무원의 병가 신청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기간 등을 판단하여 승인하고 동일 질병에 대한 병가 승인에 대해서도 진단서 등을 통해 병가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간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병가 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연가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월부터 20**.*월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병가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동일 질병을 사유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승인하는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또한 C 및 D는 감사 실시 후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 사용 당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던 사정 등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병가 기간이 각각 연 00일 및 00일이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가일수를 공제하고 재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과 병가 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재산정을 이행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연가보상금액 환수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 정]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과 병가 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없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 ‘연가 공제일수’를 반영하여 개인별 연가보상금액 환수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진단서를 확인하여 병가 신청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기간 등을 판단하여 승인하는 한편, 연가보상비는 병가 기간을 반드시 공제하여 산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근무지의 출장 숙박비 실비정산 부적정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관외출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출장의 목적 및 출장지 등에 따라 운임·숙박비·식비·일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중 숙박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2]의 각 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 중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총 숙박비를 [6만원(광역시 기준)×(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 공동 숙박에 대한 정산

신청을 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 수 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만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를 하여야 하는 바, 2021.11.30.

「규정」 개정에 따라 2021.12.9.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 수령액의 2배, 2021.12.9.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관외출장을 수행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숙박비를 결제하여야 하고, 카드 결제내역 등을 첨부한 숙박비 정산 신청을 통해 그에 따른 실비를 정산받아야 하며, 소속 기관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부정 수령액 및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0**.*.*. ‘20**년도 ㄱ 연찬회’ 참석을 위한 ㄱ과 소속 직원들의 ‘ㄴ 출장’ 및 20**.*.*~20**.*.*. 기간 중 ㄴ과 등 0개 부서 소속 직원의 ‘ㄴ면 출장(00차례)’ 시, 해당 출장자들은 숙박비 증거서류로 카드 결제내역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ㄴ팀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간이영수증에 명시된 금액대로 지급하는 등 관외출장에 따른 숙박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20**.*.*. 당시 ㄱ과 소속 직원 0명은 ㄴ 출장 시, 펜션 1곳에서 0개 룸을 임차하여 숙박하였음에도 00만원의 간이영수증 0매를 첨부하여 0명 모두 숙박비로 각각 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20**.*.*. 기간 중 ㄴ과 등 0개 부서 소속 직원의 ‘ㄴ면 출장(00차례)’ 시, 실제 숙박비 사용금액보다 과다하게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공동 숙박 및 지인 숙박을 했음에도 간이영수증을 개인별로 각각 첨부하고 개별 숙박을 한 것으로 제출하여 해당 금액 모두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숙박비를 과다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수령 금액에 대한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 정] 관외출장 시 숙박비를 과다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개인별 부정 수령액 환수 및 가산 징수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관외출장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 정산을 이행하도록 하며, 숙박비 지급 시 관련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업 등 미등록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은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내지 제28조까지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는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라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및 제8조(건설업의 종류)에 따르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되고,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1항에 따라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전기공사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번 감사기간 동안 20**. *월부터 20**. *월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 *. ** 계약한 ‘ㄱ 교체공사’ 등 0건의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로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0**. *. ** 계약한 ‘㉠센터 시설 보수’ 공사는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주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업종별 업무분야 및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ㄱ시설 증축공사 설계변경 및 분리발주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과)은 가축방역기관인 ㉠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20**. **. ** ◎◎종합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ㄱ시설 증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오수·우수관 설치, 바닥에폭시 등 추가 공사사항 발생으로 20**. **. ** (주)◆◆건설 개발과 추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의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등 설계서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지시를 받은 공사 감독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착공 후 설계서 오류·누락, 현지여건 변경, 추가 시설물 설치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실정보고를 제출하게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를 검토·승인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ㄴ시설 개보수 추가 공사’는 공종의 성격이 원래의 공사인 ‘ㄱ시설 증축 공사’와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공종으로 개별적인 시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기간과 시공장소(작업 위치)가 중첩되어 독립적인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ㄱ 시설 증축 공사’ 중 추가 공사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20**. **. ** (주)◆◆건설개발과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0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량을 의도적으로 분할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증기용 수입증지 수납금 지연납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회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말까지 인증
기용 수입증지를 카드, 계좌 등으로 수납한 경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수입금 000건, 총 00백만 원에 대하여 0일에서 최장 00일까지
지연 납입 처리하여 수입증지 납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주의] 인증기용 수입증지 수납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연 납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과, ♡검사소, ♣검사소, ●과, □과, ■과, ▲과,
인천광역시 ☆실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로 정한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대한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면 주관과장이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공시설혁신담당관에 정수물품 책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은 정수책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정수책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담당관은 정수책정 승인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물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재무관에게 해당 물품의 구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과 등 0개 부서에서는 0개 00천 원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구입하면서 정수책정 배정 승인 전 예산에 편성하여 구매하였으며, □과 등 0개 부서에서는 0개 00천 원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취득하면서 정수책정 배정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 요구 및 편성되어 구매하는 등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업무 이행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주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수책정 승인 이후 예산편성 및 취득하는 등 정수관리책정물품의 구입 이행 절차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은

[주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과(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정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시행하였다.

1. 계약체결 전 용역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이 예정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에 부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확정된 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 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하면서 00건의 용역에 대해 계약요청을 하지 않은 채 계약체결 약 0~00일 전에 폐기물을 선 반출·처리하는 등 실제 용역을 시행(준공)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입력·관리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제3항에 정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인계일자, 운반차량, 운반업체 등의 정보를 사실과 동일하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정 폐기물을 운반 업체에 인계하면서 00건의 인계일자, 차량번호 등의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사실과 달리 입력하여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작성·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주의] 계약 체결 이전에 용역을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 시 폐기물처리현장정보시스템의 인계·인수 정보 입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업무 처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과(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에 따라 시·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의뢰 받아 측정·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2호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은 연 1회 측정하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년부터 20**년까지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와 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받아 측정·분석하였고, 시·도지사 등은 대상 시설에 당해 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면제됨을 알렸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에 00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았으나, 대상 시설 중 00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사유로 당해 연도에 측정하지 않은 채, 20**. **. **. 측정종료 사실을 측정의뢰 기관에 통보하고 업무를 종료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였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00개소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공기질 측정으로 당해연도 측정이 면제된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자가측정이 누락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주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시 당해연도 내 측정·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기한내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뢰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요구·권고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센터, 인천광역시 ■과

내 용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인원, 채용사유, 채용기간,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로부터 통보된 채용 사전심사 검토 결과 및 예산 편성사항 등을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반영하여 그 계획을 토대로 채용 업무의 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등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1. 채용서류 보관관리 소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 청구기간 경과 및 채용서류 미반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하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III.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 - 나. 채용전형 단계(채용전형 시

유의사항) - ‘공공기록물인 채용서류의 미파기’ 규정에 따르면 구인자가 「공공기록물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관의 채용서류는 「공공기록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사의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채용서류의 등록·관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공공기관 채용 관련 지침을 통해 제시한 채용서류 적정 보관관리 권장사항 즉,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응시자관련 모든 서류 파기 시 발생하는 감사 활동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 곤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규정 마련 후 채용서류 보관을 권장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채용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등록·관리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9조, [별표 1], [별표 2]에 따라 공공기관은 대상기록물별 보존기간 책정 기준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을 구분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에 따라 폐기 결정된 기록물에 한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폐기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응시자 지원서류 확인결과, ○과 등 0개 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0건, 응시자 총 00명의 지원서류 일체가 채용서류의 감사·인사 목적 활용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채용서류 등록·관리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폐기되었다.

2. 공문서의 전자적 처리 소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시행하고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보존·이관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바,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기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를 거쳐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계획수립은 물론, 채용 공고,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자결정 등 일련의 모든 채용절차가 전자문서(업무관리)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반드시 전자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과 등 0개 과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총 0차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추진하면서 채용공고이후 지원서류 접수에 따른 서류 및 면접심사 등 단계별 심사결과에 대한 전자문서 결재 없이 ‘최종 합격자 공고’에 대해서만 문서결재 처리를 하였으며,

특히 20**년 *월 ◀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건의 경우에는 20**.*.**에 채용계획 보고 및 채용공고의 공문서 작성 이후, 서류·면접 심사결과 및 최종 합격자결정 보고를 위한 문서의 기안·결재 등 전자문서 결재 전혀 없이 20**.*.**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보고’만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문서 작성의 전자적 처리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3. 합격자 결정 부적정

가. 서류전형 합격대상 불합격처리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해야 하는 바, 관리부서의 장은 직종·직위의 특성에 부합된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도록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공고해야 하고,

「공정 채용 가이드북(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채용응시자에 대해 서류·면접 등 전형별 심사를 할 경우에는 당초 공고한 자격·경력 등 항목별 점수 기준에 따라 전형기준을 준수하여 착오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오류가 발생되진 않았는지 재검토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격·경력 등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요건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공고하고, 공고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함은 물론, 평가항목에 대한 평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명확히 검토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과, ◇과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심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20**. *월, 총 0차례에 걸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에서 응시자의 최종학력이 공고된 채용 분야 자격요건 중 우대사항인 ‘전문대졸 이상 학력 관련분야 (환경) 전공자’에 미해당 된다는 사유로 서류전형 합격대상자 00명을 불합격 처리 하였고,

□과에서는 20**. *월 ‘ㄱ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해당 자격 요건 외에 별도의 제한사항을 두지 않았음에도 응시자 0명에 대한 1차 서류심사 시, 응시자 A의 서류전형 불합격 결정 시,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기준에 적합한 응시자를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하였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 부적정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공정 채용 가이드북 (인사혁신처)」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담당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합격결정 되도록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는 바, 응시분야 및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 선발채용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를 공고하고, 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채용을 진행하되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객관적 항목 위주로 구성하여 당초 공고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평정하고, 합격자 결정이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센터에서는 20**년과 20**년 두 차례에 걸쳐 보조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추진하면서 응시자 A에 대한 서류심사 시, 경력에 대한 평가점수를 실 경력기간 보다 높게 부여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최종 합계점수가 착오 산출됨에 따라 합격자 결정 순위가 뒤바뀌는 부적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공정채용 가이드북(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직무수행에 합당한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형별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을 1/2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근무) 등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응시자와 제척·기피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과정의 심사위원에서 제척·기피하여 편견의 개입을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위원 위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20**년부터 20**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 만으로 위촉하였으며, ◀과에서는 20**. *월 보조요원 채용 면접 심사를 위한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응시자 B가 20**년에 인천보건

환경연구원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동일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주무관이 면접위원으로 심사를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시켰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주 의] ① 일련의 채용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시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서류의 감사·인사목적 활용여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적정한 보존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공정한 채용을 위한 응시요건, 평가기준의 명확한 공고 및 공고기준에 따른 객관적 평가, 외부 시험위원 위촉기준 준수는 물론, 시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공정·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과장은

[권 고] 기간제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채용단계별 세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이 반영된 공통지침 마련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 추진배경

- 신종감염병 출현은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방역의 “평시-전시” 구분이 무의미, 상시적 적극적 대비·대응 추진체계 구축 필요
- 감염병 진단분야 지역거점진단센터로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 추진실적

- 코로나19 최다 검사로 감염병 확산 저지 및 예산절감
 - 연구원은 코로나 19 유행 초기부터 24시간 코로나19 비상근무 중
 - 기관보유 인프라(예산, 인력, 장비 등) 총동원* → 폭발적인 감염병 확산속도 저지
 - ※ 진단장비 보강, 대응인력 특별 긴급채용, 재난기금 등 코로나 대응예산 확보
 - 공공검사기관으로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검사건수 압도적 1위
 - ※ 인천 117만, 경기 56만, 서울 57만, 부산 34만 (2022. 12. 1. 기준)
 - 대량검사로 민간기관 검사대비 약 1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 (20~21) 2년간 약 84만건을 수행, 대량검사 및 취합법으로 예산 절감
- 해외유행변이 국내유입 “최초” 확인
 - 전세계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인천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변이감시체계 필요성
 - 신종변이 진단기술법 신속구축 (21. 5.)

<해외유입 변이바이러스 “국내 최초” 확인성과>

- 2021.11. 29. : **BA.1** (남아공 유래 우려변이 오미크론)
- 2022. 4. 26. : **BA.2.12.1** (미국중심 확산 오미크론)
- 2022. 5. 12. : **BA.5** (현 유행 증가 주도)
- 2022. 7. 11. : **BA.2.75** (인도 우세종)

- 중앙기관과 협업으로 감염병 총력 대응
 - 오미크론, 델타 등 국내유입 변이바이러스 조기인지 및 중앙기관과 실시간 공유

→ 국가 방역정책 즉시 반영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등)

→ 지자체 방역 골든타임 확보

- 첨단분석장비(NGS, 21년 10월) 도입으로 변이확정 분석능력 확보

○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신속대응으로 사회혼란 최소화

- 24시간 비상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차단 및 인천 시민 불안 해소

※ 국가인증 고위험병원체 전담 취급시설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보유기관

※ 원숭이두창 : 2022(3)

※ 메르스 : 2022(3), 2021(1), 2020(7), 2019(31), 2018(67)

※ 정체불명 백색가루 및 야토병 의심환자 신속대응 (2019)

○ 전문인재 양성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지자체 역량강화

- 2020년 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역학조사관 필요성 대두

※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우리시는 역학조사관 9명 이상 필요하나 현재 공중보건과의 (군 대체복무자) 4명만 활동 중, 인재양성 시급한 상황

- 감염병 대응분야 전문인력인 부서원 중 수습역학조사관 선발하여 활동 중

→ 2023년 3명 배출을 목표로 인천시 역학조사관 인력풀 다원화 및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에 기여 기대

○ 감염병 대응 공공검사기관으로서 대외성과 (2016~현재)

- 2022년 상반기 인천 베스트 시정상 최우수상

- 2021년 감염병컨퍼런스 학술대회 동상 수상 (주관: 질병관리청)

- 2020년 감염병컨퍼런스 학술대회 은상 수상 (주관: 질병관리청)

- 2018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유공기관 (주관: 질병관리본부)

- 2016년~2022년 연속 7회 식중독 원인규명 최우수 기관상 수상(주관: 식약처)

□ 기대효과

○ 효과적인 감염병 진단대응 전략 구축과 감염병 위기대응 대비태세 확립

○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인력 배출로 지자체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강화

- ◇ 박피근채류의 갈변현상은 상품가치 하락으로 폐기의 주요 원인
- ◇ 합성화합물을 대체할 천연 갈변억제제 개발로 식품안전 향상

□ 추진배경

- 박피 근채류의 주요 품질저하현상의 원인인 갈변현상은 소비자 구매 행위의 선택기준이며, 유통 중 폐기 발생의 주요원인임
- 제조과정에서 세척, 박피, 절단 등의 공정 중 갈변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학합성표백제를 첨가하게 되는데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지양하는 추세임. 따라서 합성화합물을 대체할 새로운 천연유래 갈변억제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추진실적

- 유통 박피근채류 제품의 화학합성표백제 조사
 - 도라지 등 67건 검사 결과: 이산화황 12건, 이산화염소 4건 검출(24%)
- 개발된 천연갈변억제제(카무카무함유추출물)의 효과 연구
 - 표면색(색도) 관찰 : 무처리군에 비하여 처리군이 색의 변화가 적음
 - 효소활성 저해력(PPO저해도) : 무처리군(13.26%) < 처리군(19.47%)
 - 항산화효능(총페놀 함량) 측정 : 무처리군(0.15%) < 처리군(16.30%)
-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 출원 및 등록
 - 출원 『박피도라지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천연침지액 및 이를 이용한 저장성 향상 방법』
 - 등록 『신선편이 농산물의 갈변 방지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갈변 방지 방법』

□ 기대효과

- 박피 근채류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갈변억제제 개선
- 적용 및 실용화 타진 : 업체 공정에 활용하여 현장 효과 검증
- 안심 먹거리 공급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마련

<참고 1> 특허등록 『신선편이 농산물의 갈변 방지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갈변 방지 방법』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Patent Number	제 10-2440111 호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10-2021-0125021 호	
출원일 Filing Date	2021년 09월 17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	2022년 08월 31일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신선편이 농산물의 갈변 방지용 조성물을 이용한 갈변 방지 방법		
특허권자 Patentee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발명자 Inventor 등록사항란에 기재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 Act,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2년 08월 31일	 QR코드로 현재기준 등록사항을 확인하세요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참고 2> 특허출원

『박피도라지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천연침지액 및 이를 이용한 저장성 향상 방법』

관인생략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일자	2022.09.19
특기사항	심사청구(유) 공개신청(무)
출원번호	10-2022-0117630 (접수번호 1-1-2022-0979104-97) (DAS접근코드153E)
출원인명칭	인천광역시(2-1995-273121-4)
대리인성명	특허법인 아이더스(9-2020-100021-4)
발명자성명	허명재 주광식 권성희 박병규
발명의명칭	박피 도라지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천연침지액 및 이를 이용한 박피 도라지의 저장성 향상 방법
특허청장	
<< 안내 >>	
<div>1.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이용하여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통보된 납입영수증에 성명,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 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자번호 : 0131(기관코드) + 접수번호 3. 귀하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심사 절차(제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도 안내 : https://www.kipo.go.kr-지식재산제도</div>	

<참고 3> 관련 학술 활동

1. 2021년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발표(2021. 7. 8.)

- Analysis of chorite and chlorate in peeled root vegetables using IC-CD(강민정)

2. 2022년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발표(2022. 7. 6.)

- 천연갈변방지팩 개발에 관한 연구(권성희)
- 박피 도라지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천연 침지액 개발(박병규)

3. Korean J. Food Preserv. 논문 게재(2022. 7. 31.)

- Investigation of synthetic compounds in commercially available peeled root vegetable products

□ 추진개요

-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인천 지역의 공식적인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 제공
- 지역 대기질을 상시 분석·평가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정책자료 제공

□ 추진실적

- 인천시 대기환경측정망(31개소) 및 대기환경 감시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 인천시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와 환경전광판(6개소)를 활용하여 상시 대기질 및 고농도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
- 대기측정망 확충 등 대기질 감시기반 확대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 정보제공
 - '21년 부평역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 교체, '22년 계양구 효성 측정소 1개소 신설
- 대기환경측정소 신설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복잡한 절차 정상 추진
 - 후보지 선정, 대기질 조사, 평가단 심의회 개최, 장비구매, 고시 및 유관기관(환경부, 인천시 및 구) 협의 등을 통한 측정소 신설 완료
- 대기 측정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 확보 성과 달성
 - 환경부와 적극 협의 추진으로 국비 확보 : '22년 1개소 → '23년 3개소
- 대기 측정망 및 전광판 안전 시설물 보강공사 추진 : 시설물 관리자 안전 확보
 - 1회 추경 1억 7,200만원 확보 : 측정소 29개소(12. 27. 완료 예정), 전광판 3개소(11. 16. 완료)
- 각종 대기분야 현안 업무보고 및 전문가 세미나 발표
 - 전국 대기 측정망 연찬회 참석,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전문가 세미나 발표('22. 5.)
 - 대기분야 언론보도 및 대기 측정망 등 현안업무 총괄 보고 : 12회

□ 추진효과

- 인천시 대기환경측정망을 총괄하여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측정소 신설·노후 장비 적기 교체로 신뢰성 있는 감시기반 구축

□ 향후계획

-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 정보 제공을 위한 측정망 확충 사업 발굴 지속 추진
 - '23년 측정소 설치 3개소(신설 계양구 1, 교체 2), '25년 측정소 신설 1개소(연수구)

참고 1

대기환경측정소 및 환경전광판 위치도



※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대기질 관제 시스템

대기질 측정	대기질 관제 · 감시	실시간 자료공개
 <p>[대기환경측정소]</p>	 <p>[대기오염상황실]</p>	 <p>[인천시 환경정보공개시스템]</p>  <p>[전국 에어코리아]</p>  <p>[인천시 환경전광판]</p>

참고 2

보도자료 및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 언론보도

경기일보
2022년 7월 7일 목요일 012면 인천

대기환경측정망 ‘더 촘촘하게’

**보건환경연구 계양구 1곳 추가 설치
인천지역 측정소 31곳으로 늘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계양구 효성동에 대기환경측정소 1곳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설치로 인천의 대기환경측정소는 모두 31곳으로 늘어났다. 2018년 20곳과 비교하면 11곳이 늘어난 것이다. 또 계양구에 설치한 대기환경측정소도 2곳으로 늘어나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기환경측정소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일사량 등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환경측정소의 추가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 측정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의 생활권에 가깝고도 촘촘한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구분포 및 밀도, 측정소별 거리, 주변 오염원 등을 먼저 검토하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대기환경측정소의 설치 장소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실태, 변화추이 및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중 50%를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했다.

김민기자

□ 전문가 세미나 발표

인천광역시

항만지역 미세먼지 오염원 규명 전문가 세미나

항만지역 미세먼지 오염도 산정 방법론

- 3차원 광화학 모델(CMAQ) & 수용모델(PMF) 활용 -

LEE JIN SOOK
july8099@korea.kr

ATMOSPHERIC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on 30 May 2022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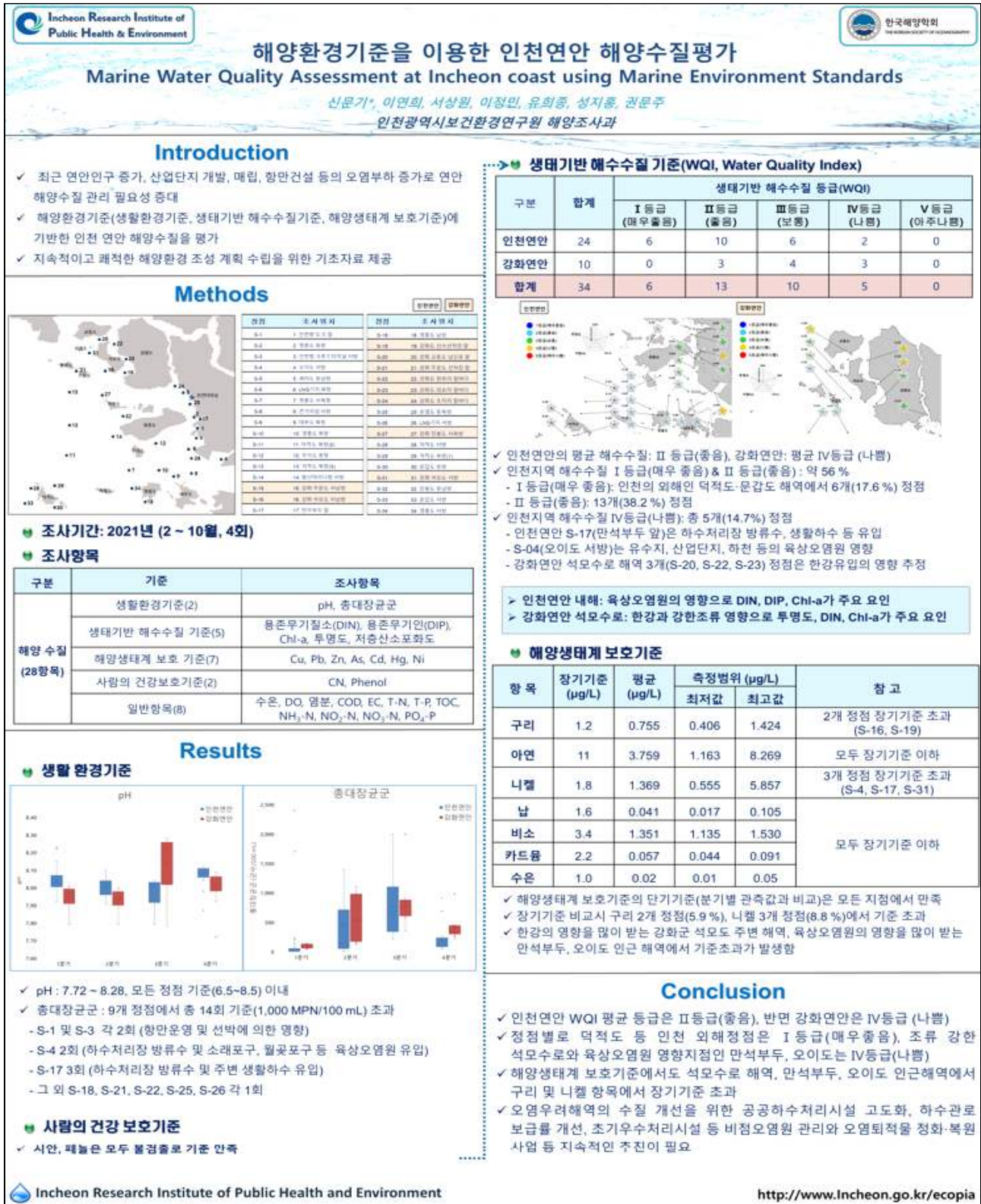
- 최근 인천연안 산업단지 및 매립 등 오염 부하량 증가 추세
- 워터프런트 사업 등 시장 공약사항 추진 및 정책효과 분석 필요

□ 추진실적

- (해양수질측정망 조사·운영) 인천 연근해 해역 34지점
 -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의 오염실태 및 변화추세 파악 (190건)
 - 해양수질평가지수(WQI)를 이용한 해역별 수질등급 평가
 - 해양수산부 환경관리 이행실태 평가 “인천연안 우수해역 선정”
 - 2022년 한국해양학회 학술대회 연구결과 발표
 - 해양환경기준을 이용한 인천연안 해양수질 평가
- (송도워터프런트 수질조사 확대강화) 우수지, 호소공원 등 20지점
 - 우수지 및 호소 공원 등 선제적 수질진단 및 평가 (240건)
 - 수질평가지수(WQI)를 활용한 해수질 비교조사
 - 해수정화시설(여과 → 소독공정) 처리효율 및 수질분석
 - 쾌적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정기 모니터링에 따른 수질민원 최소화
- (물품 무상양여로 예산절감) 고정식 부이 1식
 - 노후 해양측정소(2011년 설치) 운영중단 및 철거비용 발생
 - 경제청 물품 무상양여 협의 및 센트럴파크 공원 내 조형물 존치
 - * 측정장비(용존산소, 탁도 등 7종) 자체 연구활용
 - 물품 처리비용 예산절감(12,000천원) 등 적극행정 추진
- (미세플라스틱 분포조사 확대) 강화 및 인천연안 총 9개소
 - 지자체 최초 미세플라스틱 조사(2019년) 및 크기·재질별 풍부도 파악 (216건)
 - * 조사지점 : 5개소(19년) → 7개소(21년) → 9개소(22년), 풍부도(particles/m³) : 해수 1m³ 중 미세플라스틱 개수
 -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유입특성 파악 및 체계적 대응방안 제시

□ 사업효과

- 해양환경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자료 확보
- 장단기 해양오염 저감계획 수립 및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기여





Incheon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http://www.Incheon.go.kr/ecopia>

참고 2

2023년 송도워터프런트 수질조사 확대강화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송도 국제도시 친수공간 수질조사 확대강화 계획(안) 보고

송도 국제도시 친환경 물순환시스템 구축에 따른 해양친수공간 등의 수질 모니터링 확대 강화 계획을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23. 1. ~ 계속
나. 대 상 : 유수지 및 호소 공원 등 20지점
다. 방 법 : 현장채수 및 시료분석 (월분 등 23종, 월 1회)
라. 평 가 : 수질평가지수(WQI) 등을 활용한 수질진단 및 분석
마. 활 용 : 시 및 경제청 등 자료제공으로 시민체감 수질개선 기여
※ 워터프런트 진행 상황에 따른 대상지점 등 변경가능

붙임 송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수질조사 계획(안) 1부. 끝.

주무관 박민경 해양조사과장 유학봉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송지훈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2023.8.11.
참조자
시행 해양조사과-826 협수
부 2232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 (신호동2가) / https://www.incheon.go.kr/ecopia
전화번호 032-440-5522 팩스번호 032-440-8804 / parkek1970@korea.kr / 부본공개(5)

(2023) 친환경 물순환시스템 구축에 따른

송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수질조사 계획(안)

2022. 8.

仁川保健環境研究院
http://ecopia.incheon.go.kr

해양조사과

송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수질조사 계획(안)

- ❖ 친환경적 물 순환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 및 평가
- ❖ 고품격 친수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 조사개요

- 목 적 : 송도신도시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개선 기여
- 기 간 : 2023년 1월 ~ 계속
- 내 용
 -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에 따른 정기 수질모니터링 실시
 - 물 환경 관리를 위한 수질평가 및 수질개선 방안 제시

□ 추진계획

- 대 상 : 송도 유수지, 호소 공원 등 20지점 (월 1회, 총 240건)
 - 워터프런트(유수지) 12지점
 - 북측(7), 6공구(3) 및 4~5공구(2)
 - 송도공원(호소) 7지점
 - 센트럴파크*(3), 미추홀(2) 및 해돋이(2)
- ※ 해양수질측정센서(센트럴파크) 운영 중단 (선지 2011. 7. 중단예정 2023. 11 (붙임 1))
- 해수처리시설 1지점
 - 센트럴파크 해수처리장
- 방 법
 - 채 취 : 현장채수
 - 항 목 : 23종 (현장측정 : 염분, pH 등 7종) + (실험실분석 : TOC, 중금속 등 16종)

구분	조사항목
수질 (23종)	(매월) 수온, pH, DO, 염분, 전기전도도, Chl-a, 부영양도, 저층산소포화도, T-N, T-P, DIN, DIP, TOC (반기) 시안, 캐논류, Cu, Pb, Cd, Zn, Cr, As, Hg, Ni

※ WQI = 10 x (저층산소포화도) + 6 x [(Chl-a + 부영양도)2] + 4 x [(DIN + DIP)2]



□ 그간 추진실적

- 지적선청을 위한 사전답사 및 현황파악
- 자료조사
 -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파업지시서(경제청, 2014-2015)
 - 워터프런트 1-1공구 실시설계 보고서(경제청, 2018)
 - 워터프런트 1-2공구 실시설계(안)(경제청, 2022)
 - 송도공원(센트럴파크, 미추홀, 해돋이) 수질관리 현황(인천시살균단, 2022)

□ 세부 추진계획

- 유수지 및 호소 공원 등 수질조사
 - 수질평가지수(WQI)를 활용한 해수질 비교평가
 - 해수정화시설(여과 → 소독공정) 처리효율 및 수질분석
- 관계기관 수질관리 자료 제공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송도 해양수질측정소 무상양여(안) -

☐ 목 적

- 송도워터프런트 수질조사 확대에 측정소 운영중단 및 활용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의원 요구자료 (연구장비 활용방안 모색)

☐ 개 요

○ 물 품 : 고정식 부이 (센트럴파크 수질측정)	
○ 설치년도 : 2011. 7. 25.	
○ 양여사유 - 수질측정소 운영중단 예정 ('22. 12월) - 워터프런트 수질모니터링 ('23. 1월)	

☐ 그간 추진경과

- 송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수질조사 계획수립 ('22. 8월)
 - 유수지·호소공원 등 20지점 (월 1회)
- 경제청 무상양여 협의 (8 ~ 9월)
 - 센트럴파크공원 내 조형물 존치 ('23. 1월부터)

☐ 향후계획

- 물품관리전환 합의서 작성[연구원, 경제청 공원운영팀 (12월 말)]
- 시(재정기획관) 무상양여 처리 신고 및 물품 인계인수 ('23. 1월)

☐ 기대효과

- '23년 측정소 운영중단으로 송도국제도시 수질조사 등 확대 강화
 - 공공운영비 (40,000천원) → 재료비 이관
- 노후물품 처리비용 절감 (약 12,000천원) 및 적극행정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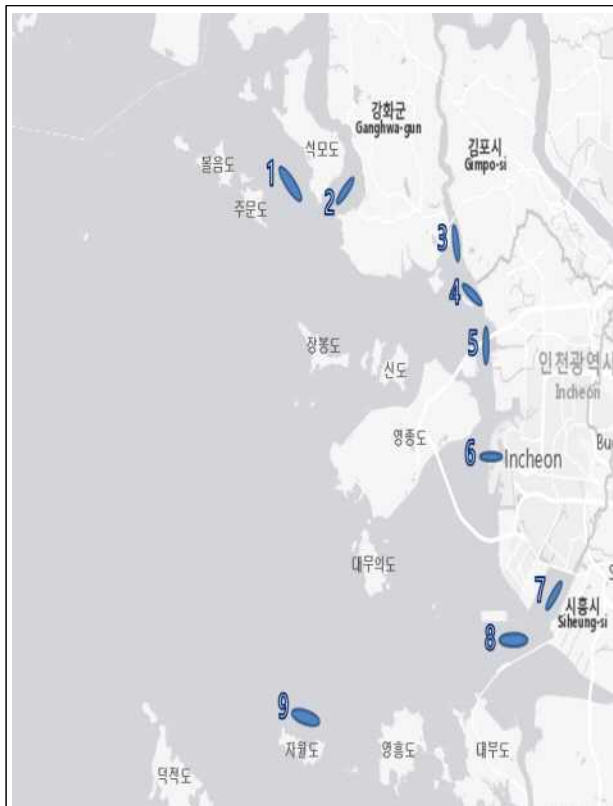
참고 4

미세플라스틱 분포조사 확대

□ 인천연안 미세플라스틱 조사

* 22년 신규추가

구 분	조사지점 및 오염원
강화연안 (2개소)	1. 석모도 해역 (한강 등 오염원) * 2. 선수리 해역 (한강 등 오염원) *
인천연안 (7개소)	3. 황산도 해역 (한강 등 오염원) 4. 세어도 해역 (한강 및 수도권 매립지 등 오염원) 5. 영종대교 해역 (수도권 매립지 및 아라천 등 오염원) 6. 인천항 해역 (인천내항 등 오염원) 7. 소래포구 해역 (소래포구 등 오염원) 8. 인천신항 해역 (인천신항, 유수지 등 오염원) 9. 자월도 해역 (대조군)



수범사례 5 [방역관리과]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추진

-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상시예찰 강화로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 사전 차단

□ 추진배경

- 2022년 경북 예천(10.17.) 발생 이후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 전국 20개 시·군 33건(인천 비발생), 야생조류 전국 68건(웅진군 1건)
- 인천시 2016년 서구 발생 이후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유지

□ 추진실적

- ‘22~’ 23년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상황실 운영(22.10.1.~23.2.28.)
 - 근무시간 : (평일) 9:00~21:00, (휴일) 10:00~18:00 ※ 상황실장 : 시험소장
 - 신고 접수 및 신속 초동방역 등 대비 철저(24시간 비상체계 유지)
- 축종별 강화된 AI 검사체계 운영 중(22.10.12.~)
 - 신란계·종계·매추리 : 2주 1회(당초 월 1회) / 육계 도축장 출하전 AI 정밀검사 등
- 취약시설(닭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등) 환경검사로 교차오염 방지
 - 닭 도축장 매주 1회, 거점소독시설(강화군) 월 3회 검사
- 농가, 닭 도축장, 철새밀집지역 등 소독지원(광역방제기 1대, 소독차량 1대)
- 인천시(웅진군) 야생조류 발생 관련 조치
 - (10.26.~10.27.) 방역대 농장 시료채취(인후두·총배설강 swab)
⇒ 가금농장(닭, 거위 등) 42개소 정밀검사(PCR) 전 건 음성
 - (11.7.~11.8.) 백령도 사육 가금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 및 방역대 해제

□ 기대효과

-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방지 도모로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사전검색을 통한 차단방역으로 양축농가 보호